아이 많이 낳으세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30일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아이낳기 좋은세상 광주·전남운동 본부' 출범식 도중 어린이 국악단의 '아이 낳기 결의'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소득 4~7분위, 소득 발생 시점까지 이자 안내도 돼 기초수급자 성적, B학점 나머지는 C학점 유지해야"

내년 시행 새 학자금 대출제도 일문일답

정부는 내년 시행하는 새 학자금 대출 제도는 졸업후 취업을 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새 제도를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무엇이 달라지나.

▲거치기간에도 소득 4~7분위는 이자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발생 시점까지 이자납부 부담이 없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소득 9~10분위 학생도 대출 대상이 된다. 7분위 이하 중산층 가정의 자녀는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생에게는 선택권을 준다. 졸업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소득계층 구분없이 새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상환 의무 발생 기준소득은.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다. 기준소득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졸 초임과 최저생계비 수준,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9월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취업 후 상환금액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A라는 학생이 대학 4년간 1년에 800만원씩 총 3천200만원을 대출받았고 대출받은 시점으로부터 만 7년이 되는 해에 취직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자율이 5%라면 이자는 대출 첫해 40만원, 2년차 80만원, 3년차 120만원, 4년차 160만원이 발생하고 취직을 하지 못한 2년 동안에도 매년 16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A학생이 취직하기 직전인 만 6년째까지 상환액은 총 3천920만원(원금 3천200만원+이자 72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을 취직 전에는 전혀 내지 않다가 취직이 된 시점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다. 원리금 상환 기준소득이 연 1천500만원, 상환율이 연 20%로 정해졌고 A학생의 취직 첫해 연봉이 2천500만원이라면 2천500만원에서 기준소득 1천500만원을 뺀 1천만원의 20%, 즉 200만원을 그 해에 갚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A학생은 취직 후 상환원금을 모두 갚기까지 12년이 걸린다. 원리금 상환 기준소득과 상환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학자금 대출 기준 성적을 높여야 하지 않나.

▲지금은 기초수급자 등록금 무상보조(연 450만원) 대상자만 B학점 이상이며 나머지는 모두 C학점 이상을 요구한다. 등록금 무상보조가 없으므로 'C학점' 기준은 같다. 성적 기준을 높이면 대출 대상자가 축소돼 부담이 높아지고 생활비를 조달하느라 공부 시간이 적은 저소득층 자녀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4대강 살리기'에 SOC 예산 무차별 삭감

호남고속철 등 현안 차질 큰우려 SOC 불균형 고려 지역배려 절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광주·전남지역 SOC(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6조7천억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의 대폭 삭감에 나섬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광주·전남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철도예산안과 관련, 올해보다 29.0%가 준 3조 2천548억원으로 확정해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내년 요구액(4천800억원)의 41.1%인 1천975억원만 반영되면서 2014년 완공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도 요구액의 70% 이상이 삭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전남지역 국도 건설 사업 47건 가운데 익산국토관리청이 요청한 예산이 전액 반영된 사업은 단 7건에 불과하다.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 확보도 암울한 상황이다. 아직 기획재정부의 최종 예산 배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국토해양부가 요청액의 30~40% 정도의 삭감안을 올렸다는 점에서 추가 삭감이 이뤄진다면 전체적으로 50% 이상의 예산 삭감이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취약한 광주·전남지역의 접근성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접근성이 뒤떨어진 광주·전남지역의 상황을 고려하고 4대강 사업 예산의 60% 이상이 낙동강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SOC 예산 배정에 있어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를 위한 무작위적인 예산 삭감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특단의 공조 체제를 구축, 내년도 지역 SOC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무리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호남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워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 삭감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재정부 "4대강과 예산 삭감은 별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의 증액과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30일 해명했다.

재정부는 내년에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을 많이 넣다 보니 다른 사회인프라(SOC)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SOC 분야에 평균 17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2008년과 2009년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조원과 25조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남해안 공원구역 어디가 해제되나

투자유치 가능한 지역 최우선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완화·해제될 듯 환경보전 지자체에…무분별 개발 우려

정부가 30일 발표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는 전남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공원구역 해제와 숙박시설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침체한 지역투자와 관광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도는 2개의 해상국립공원을 끼고 1천96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섬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전남 최대 섬 개발사업인 '신안 갤럭시 아일랜드'사업지구의 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해상 케이블카 설치, 숙박시설 설치 완화 등 숙원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현황 및 해제 지역은 어디?=전남도 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인 여수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여수와 신안·진도·완도·고흥 등 5개 시·군으로, 2천321㎢에 달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서직 장소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자원보호구역도 전국 10곳 가운데 5곳이 전남에 집중돼있다. 전남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총 면적 1천500㎢로, ▲도암만 ▲함평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등 5곳이다. 여수·순천·고흥·무안·영광 등 전남 11개 시·군을 낀 전남 서남해안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곳은 농어업용·공공시설 외에 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부의 이번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전남지역 해상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 등은 모두 구역조정 및 행위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아직까지 공원구역 조정 및 행위제한 완화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투자유치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환경훼손에 영향이 적을 경우 용도지구 조정이 가능하게 돼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에 따라 공원구역 조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달라지나?=우선 주민집단 거주지역, 숙박·음식업소 밀집지역뿐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건폐율 20%, 높이 9m의 숙박시설 허용기준은 호텔이나 휴양콘도 설치가 불가능해 관광개발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으나,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 내 일부 지역은 숙박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도록 유선장 설치 허용한도가 기존 3천250㎡에서 1만5천㎡로 확대되고, 자연보존지구 내 선착장 설치허용 면적도 현재 300㎡에서 중형 선박과 소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3천250㎡로 넓히기로 했다. 따라서 여수와 목포 등 관광거점 지역에 대한 대형 크루즈 접안시설과 배후관광단지 개발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육지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와 도서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앞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해제될 것으로 보이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과 해양레저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환경보전 딜레마=정부는 규제완화와 함께 각종 환경보존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환경보전·관리계획 수립의무와 이행계획 점검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살그머니 발을 빼 지자체로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다.

개발정책과 사업을 대부분 지자체가 추진하고, 환경보전 관리와 점검까지 지자체에 맡기면 관련 업무가 엄격히 이뤄질지 의문인데다 현재 민자유치를 앞다퉈 벌이고 있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도 우려돼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최권일기자 cki@